

Second Thoughts about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rew Horvat

동경경제대학 경제학부 객원교수

거의 모든 나라는 부정적인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 화해의 길로 가기 위해서 유럽은 많은 노력을 하였다. 기독교 정신을 매체로 하여 화해를 이루려고 했던 MRA(Moral Armament)운동이나 나폴레옹 3세 당시의 보불 전쟁이나 1, 2차 세계대전 등을 거쳐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 노력인 엘리제 조약 등이 있다. 이들을 시초로 한 여러 노력들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은 있으나, 정부가 각 활동들을 조정하지는 않는, 즉 국경을 넘나드는 비정부 관여자(transnational non-state actors)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에 비해 동북아시아의 화해를 향한 활동은 활발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화해를 향한 노력에서의 충전제는 비정부 관여자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종교적으로 기독교의 예를 들자면, 한국의 비교적 높은 기독교 인구 비율에 반하여 일본은 1% 가량의 미미한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교를 통한 화해노력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시민활동 상황을 보아도 한국의 시민활동에 비해 미미한 일본의 시민활동으로 인해 이마저 순조롭지 않다. 이는 일본 민주주의의 시민활동 부재의 맹점을 노출한다. 그러나, 비교적 활발한 한국 측의 시민활동도 화해보다는 역사정의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상황도 일본의 경우, 유럽의 “정부의 지원은 있으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것과는 달리,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나, 간섭은 하는” 상태이므로, 정부의 굴레에서 벗어난 화해무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Q&A>

Q) 화해를 위해선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A)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간의 교류가 중요하다. 문제는 지방정부에 자금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이의 해결을 위해, 간섭을 가능한한 최소화하면서, 자금 지원을 하는 선에서 멈추어야 한다.

Q) 최근 한국의 친일과 처벌 옳은가? A) 물론 위안부를 통해 이익을 얻는 등의 악질친일파는 엄히 처벌함이 옳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한국 정부의 국내민심을 얻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해 보인다. 오히려,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화해를 향해 가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Q) 일본의 시민활동은 정말 그렇게 미미한가? A) 시민활동은 비영리 부문이라는

개념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일본은 시민들이 직접 모여서 무엇인가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활동이 매우 미미한 상태다.